

與 국감 거부에 野 ‘백남기 특검’ 맞불

야 3당 공동기자회견 “진상규명해 반드시 책임자 처벌” 안행위 의원들, 부검영장 재신청 철회 경찰청 항의 방문

김재수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사태로 여야가 강경하게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야권이 농민 백남기씨 사망 사건의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나서 정국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새누리당이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 논란과 관련, 국정감사 거부에 나서고 있는데 대해 야권은 농민 백남기씨 사망 사건 특검으로 맞불을 놓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은 27일 농민 백남기 씨 사망사건과 관련, “야3당은 백남기 농민의 사건에 대해 특검을 적극 검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재호 더민주 의원과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백남기 농민 사망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는 처벌받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경찰은 부검영장을 재청구했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유족과 협의가 없었다”며 “유족의 상처만 헤집는 영장은 기각돼야 한다. 검찰이 집요하게 부검을 요구하는 이유부터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

는 지난 26일 백씨의 장례식장에 방문, 유족을 만나 “고인을 편안하게 보내드리는데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며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는 노력을 해야한다”라고 말했다.

추미애 대표도 백씨의 빈소를 찾은 뒤 기자들과 만나 유족의 특검 요청에 대한 입장을 묻자 “그것도 검토를 하겠다”라고 말한 뒤,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은 명백한 경찰력 남용과 인권침해”라는 제목의 영문 성명도 외신에 배포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도 지난 26일 빈소를 찾아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가권력이 국민의 생명을 앗아갔다”면서 “반드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해야한다”며 특검에 대한 의지를 보인바 있다.

박지연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이날 조문 뒤 기자들과 만나 “대책위 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특검 문제에 대해서야 3

당 원내대표들과 협의해 좋은 방향으로 결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경찰의 고(故)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영장 재신청 철회를 촉구하며 경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안행위 야당 간사인 더민주 박남춘 의원과 표창원·진선미 의원 등 9명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찾아 이철성 청장을 면담했다.

박 의원은 면담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고집스럽게 영장을 재청구하는 것은 경찰이 자신들의 물대포에 의한 공권력 남용을 숨기기 위한 것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경찰의 전날 밤 부검 영장 재신청을 강하게 비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더민주 ‘농심 챙기기’

지도부, 농민들과 쌀값 간담회

추미애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7일 전북을 찾아 농심 챙기기에 나섰다.

전북 김제의 갈아엎어진 논을 둘러보고, 지역 농민들과 쌀값 대책 간담회를 개최한 것이다. 쌀값 폭락으로 농촌 민심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대표적 농도인 호남 민심 잡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추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이날 김제시에서 열린 쌀값 대책 간담회에서 쌀값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고 더민주의 지원을 약속했다. 추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정부와 농업의 매입계약, 수입쌀 관리, 쌀소비 대책 등 미온적이고 추상적인 대책에 불과한 속빈 강정”이라고 비판했다.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공공비축미의 우선 지급금 삭감 백지화 ▲시장격리물량 확대 ▲목은쌀 30만톤 이상의 사료화 등 쌀 소비 대책 방안 마련 ▲북한 수해지역의 인도적 지원 등 정책을 정부가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전북도당위원장 김춘진 최고위원은 “정부의 공공비축미의 전량을 금년에 구매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간담회에 참석한 농민단체 관계자들로부터는 쓴 소리가 이어졌다. 쌀생산자협회 박흥식 전북본부장은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문을 걸어 잠그고 농성까지 한다”면서 “야당도 이런 자세로 해야 한다. 식량 자급을 법제화를 추진해달라”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수확의 들녘 찾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운데)와 최고위원들이 27일 전북 김제시 벽골제로 인근의 갈아엎은 논을 찾아 현장을 살피고 있다. 농민들은 수확을 앞두고 쌀값 폭락으로 눈을 갈아엎었다./연합뉴스

이정현 “다수 야당이 국정 발목” vs 박지원 “불타는 정국에 휘발유 뿌려”

여야, 단식 농고 이틀째 공방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단식농성 이틀째인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와 야당 지도부 간 공방이 연일 벌어지고 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27일 “야당은 국회와 의회주의를 파괴하고 다수당의 횡포를 칼춤 추듯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누가 다수당이 국회의장이냐에 따라 자의적으로 적용되고 운영되는 고무줄 국회법을 방치하고 싶지 않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이 대표는 “과거에 이렇게 (단식)하면

소로 봤지만 제가 하는 것은 소가 아니다”라면서 “파괴된 의회민주주의, 더불어민주당의 2중대인 국민의당에 의해 저질러진 횡포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이 대표의 단식 농성에 대해 “타고 있는 불타는 정국에 휘발유를 퍼붓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과거 야당에서 의원직 사퇴와 단식, 삭발이 세가지를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했는데 전부 정지 소로, 단식은 성공한 적 없다. 삭발은 다 머리 길렀다”면서 이 같이 비판했다.

또한, “갈등을 풀어야 할 집권여당 대표가 사상 초유로 단식 농성을 하는 이런 역사를 찾아볼 수 없다”면서 “기자가 마주 보고 가만 충돌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비대위원장은 “새누리당의 많은 온건파 의원들은 국감을 원하고 있다”면서 “어떻게든 국민의당이 (국감 파행 정국을) 풀어달라는 전화를 여당 의원들로부터 받고 대화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대표를 단식농성을 중단하고 이상황을 원만하게 타개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감 브리핑

“침몰 선박 2158척 중 42% 남해안에 수장”

국민의당 황주홍



를 차지했으며, 화물선 111척, 예인선 71척, 부산(解船) 53척 순이다.

유조선과 가스운반선, 여객선도 각각 5척, 2척, 12척이 침몰된 채 방치돼 있지만 해수부는 기를 양이나 선박 상태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 해수부는 단 32척에 대해서만 조사를 벌여 1만541k의 잔존유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황 의원은 “침몰 선박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인양 비용이나 조사 비용 등 예산을 확보해 해양환경 오염 사고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황주홍(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이 27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83년 이후 국내 해상에서 침몰한 선박 2158척 중 911척(42%)이 남해안에 수장돼 있으며, 서해안과 동해안에는 각각 799척(37%)과 448척(21%)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규모별 침몰 선박은 10톤 미만 소형선박이 1030척으로 가장 많았으며, 10톤~100톤 중형급 849척, 100톤 이상 대형선박 279척이며, 이 중 3척은 1만대 이상이다.

선종별로는 어선이 1752척으로 81%

“교육용 전기 기본요금 비중, 산업용의 두배”

국민의당 손금주



학 등으로 인해 그 편차가 매우 큰 상황이어서 종실제 사용요금보다 기본요금이 차지하는 부분이 높아 불합리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교육용 전기 전체요금 대비 기본요금 비중은 42.9%로, 20.5%인 산업용과 18.6%인 농사용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사회적 형평성을 따져 구조적으로 전력사용 편차가 큰 교육용의 경우 월별 피크전력을 적용하는 등의 다른 요금과는 다른 산정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옳다”면서 교육용 전기요금 개편을 주문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손금주(나주·화순) 의원은 27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현행 교육용 전기 산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누진제 개편과 함께 교육용 전기요금 개편 필요성을 지적했다.

손 의원은 “교육용 전기요금의 기본요금은 당월포함 직전 12개월 중의 최대 수요전력을 적용한 것으로, 문제는 이 피크전력이 15분 단위로 계산되는 전력이라서 단 15분의 사용량이 1년 동안의 기본요금을 결정한다”면서 “연중 전력사용 편차가 크지 않는 산업용과 일반용 등에 비해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방

“전국 1인 소방서 59곳 중 31곳이 전남에”

국민의당 권은희



특히 관할면적이 가장 큰 지역인 강원 인제 서화지역대는 독도 면적(약 0.18km)의 1472배에 이르는 265km를 담당, 소방관 1인의 활동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져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권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1인 지역대를 최대한 개선하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며 “절반 이상이 전남에 밀집돼 있어 안전성은 부족한 전남권 소방 인력 충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소방관 한 명만 상주하는 ‘1인 소방서’가 전국에 59곳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남에 절반 이상이 있었다.

2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1인 소방서 현황’에 따르면 전국 1인 지역대는 총 59곳으로 이 가운데 52%(31곳)가 전남에 있었다.

또한, 전국 1인 지역대 25%(15곳)는 소방관 한 명이 10만㎡ 이상을 관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관 1인이 10만㎡ 이상을 관할하는 지역은 전남이 31곳 중 2곳, 강원이 14곳 중 9곳, 경북이 14곳 중 4곳 순이었다.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자금대출 대방출

자영업자를 위한 햇살론이 희망을 드립니다

- 대상자 : -3개월이상 영업중인 사업자
- 연소득 4,000만원 이하로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자영업자
-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3,0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 대출한도 : 최대 2,000만원 (창업자금 5,000만원)
- 대출금리 : 4.7% ~ 4.9%
- 대출기간 : 5년(1년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정책자금 1,000억원 한도내 선착순 마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



주유소사업소 720-2800

